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급증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이를 이용하게 했다가 수천~수만 원의 정보 이용료를 청구하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휴대전화 결제로 15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해주고, 대출액의 40%를 선이자로 떼가는 '휴대전화 갹'도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상품권 도착' 문자 메시지=취업을 준비중인 나모(26·광주시 남구 월산동)씨는 지난 5월 '롯데백화점 20만 원 상품권 도착'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웬 떡이냐?' 싶었다. 곧바로 '접속하기'를 눌러 문 제만 풀면 전자수첩을 준다는 말에 별생각 없이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나씨에게 날아든 것은 전

정보 이용 미끼 수천~수 만원 청구 선이자 40% 공제 불법대출도 기승

자수첩이 아니라 정보이용료 3만8천 원이 포함된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신고 건수는 2003년 59건에서 지난해 1천269건으로 무려 20배 이상 늘었다.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이 인터넷 다음 카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cafe.daum.net/soeak)을 만들었는데, 지난 3월부터 접수된 피해 사례는 1만1천600여 건으로 이 중 200여 건은 광주·전남지

역 피해자들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김정옥 차장은 "법백하게 명의도용이 입증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나 공짜 광고성 배 이상 늘었다.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이 인터넷 다음 카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cafe.daum.net/soeak)을 만들었는데, 지난 3월부터 접수된 피해 사례는 1만1천600여 건으로 이 중 200여 건은 광주·전남지

역 피해자들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김정옥 차장은 "법백하게 명의도용이 입증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나 공짜 광고성 배 이상 늘었다.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이 인터넷 다음 카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cafe.daum.net/soeak)을 만들었는데, 지난 3월부터 접수된 피해 사례는 1만1천600여 건으로 이 중 200여 건은 광주·전남지

에는 소액결제로 8만원이 청구되어 있었다. 아들은 8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선이자로 40%를 떼 뒤 4만8천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고백했다.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명의로 가입돼 있는 휴대전화여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대출이 된 것이다.

불법대부업체들은 온라인쇼핑몰이나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것처럼 한 달에 최고 15만원까지 휴대전화 소유자가 결제하도록 한 뒤 결제 금액의 60% 정도를 현금으로 빌려준다. 일반적으로 결제 대금이 한 달 후 청구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이자율이 무려 40%, 연리로 치면 500%나 되는 초고금리 대출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남도 70억 도로공사 발주 입찰공고 잘못 업체들 반발

행정착오로 참가 못해

전남도가 사업비 70억 원대의 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변경공고를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이 반발, 말쟁이 일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완도군 약산면 '약산우회도로 정비사업(3.5km 확장)' 입찰을 실시해 B건설을 적격심사 1순위 업체로 결정했다. 입찰은 조달청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낙찰가는 70억8천7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전남도가 입찰진행 과정에서 공고 내용에 행정착오를 일으켜 일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난 5월 해당 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G2B상의 사업 면허사항을 '토목과 토목건축 동시보유(AND)'로 냈다가 이를 '토목 또는 토목건축 가운데 하나만 보유한 업체

(OR)'로 변경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는 '이미 응찰한 업체는 자동 이관된다'고 공고했으며, 이에 따라 당초 입찰에 참여했던 30개 업체 가운데 8개 업체가 입찰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찰관련 서류는 자동이관되지 않았고, 전남도의 '자동 이관' 공고 내용만 믿었던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전남도는 기존 응찰업체 가운데 변경공고를 보고 서류를 다시 제출한 22개 업체를 포함, 총 12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6일 개찰을 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 B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8개 업체가 "전남도의 행정착오로 입찰에서 탈락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도 재입찰에 나설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

니원침 (7248) 김장두



정부 '휴대폰 결제 갹' 단속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한 불법대출(일명 '휴대폰 결제 갹')이 급격히 확산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는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휴대전화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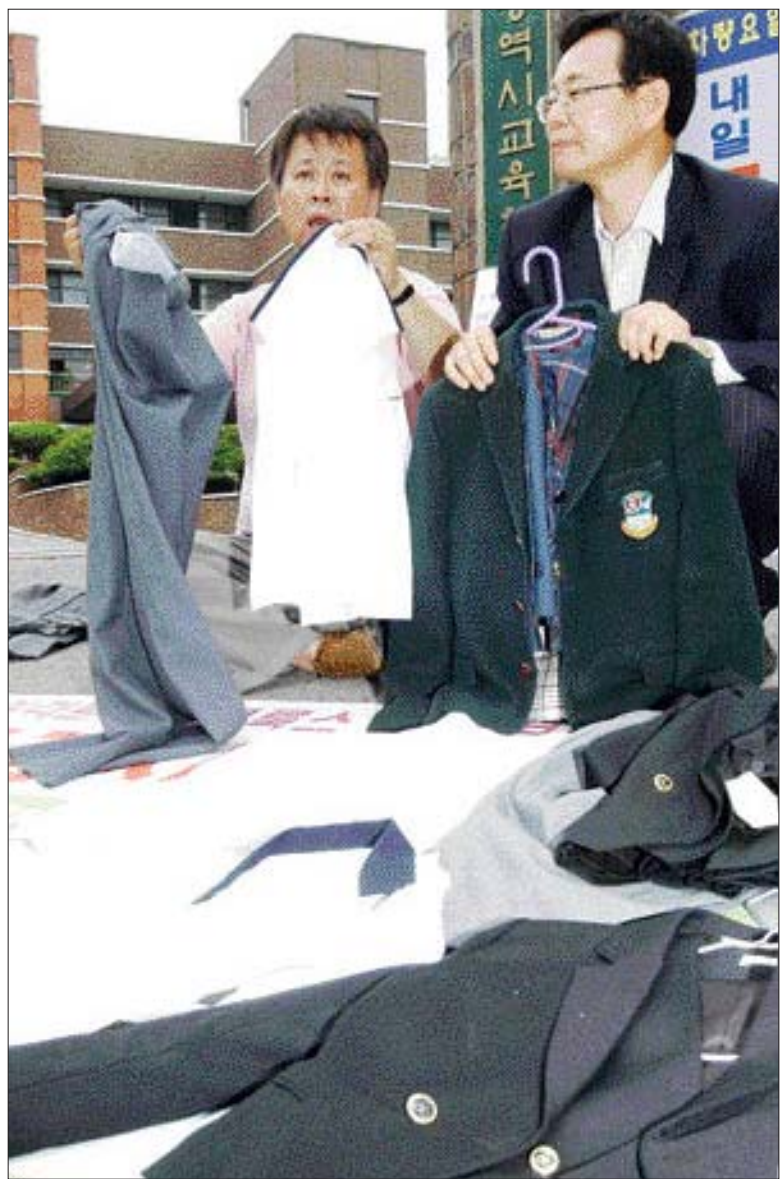
이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후 결제금액 중 40% 가량을 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불법 대출방식이다.

정통부는 이런 불법대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포털 업체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결제 대출 광고를 자체해결 것과 휴대전화 결제 관련 키워드에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는 조속한 시일내에 성인인증절차를 두기로 했으며, NHN(네이버)과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엠펙스)는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대출 관련 신규 키워드 광고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출 자체가 불법화된다고 말하고 특히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행위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것이 짝퉁 교복"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최미숙)은 28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대형 교복회사 4곳의 시기행각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나서서 교복업체들의 부당이익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응징 등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지검, 대선 전담수사반 운영

광주지검이 오는 12월 19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대비체제에 들어갔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은 검찰 공안부 인력 외에 공안수사지원팀·정보통신 인력 위주로 편성해 선거수사 지원 및 인터넷 상시 검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 ▲각종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

이다. 또 UCC(User Created Content·사용자제작 콘텐츠) 등을 이용한 사이버 흑색선전에 대비,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상시 검색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광주지검 김용승 공안부장은 "소속 정당·신분·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가격담합' 교복 3사 1억5천만원 배상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7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천525명이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비싸게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등 대형 교복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업체 3곳은 연 3천억원 규모의 교복시

장에서 지역별 카르텔 결성이 쉬운 점을 이용, 3년간 전국대리점 대표 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직원 사칭 취업 사기

전남경찰, 5,2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취업 미끼로 구직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챈 박모(42·광주시 북구 삼각동)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말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모 횡집에서 김모(39·광주시 북구 풍향동)씨 등 3명을 만나 자신을 국정원 고위간

부인 것처럼 신분을 속인 뒤 "K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1인당 1천만~3천만원, 모두 5천200만원을 취업 앞선비와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1월 초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스키퍼를 이용, 국정원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